

‘투잡 예비군법’ 국회 통과... “숙련성 저하 우려” 반응 싸늘

예비군 180일 복무 관련법령 통과
“매력없는 근무조건, 실효성 의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 “답답”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취지는 상비병력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숙련된 예비군을 장기간 복무시켜 보완 하자는 것이다.

일명 ‘투잡 예비군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안에 대해 당초 연간 15일을 자원해서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예비군의 복무안정성’과 ‘위상강화’를 기대하면 환영했지만, 개정안 통과 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숙련 예비군 모집될지 의문, 병장 오고 소령은 나가라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구성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투잡 예비군법에 대해 차갑게 반응하는 이유는 예비군 숙련성 저하 우려 때문이다. 2022년부터 병장 전역자가 180일을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육군은 장기비상근 예비군으로 명명)’에 편성되면서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소·중령 예비군들 상당 수가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제외됐다.

당초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한



육군본부가 배포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안내서. 비상근 복무에 익숙한 간부예비군들이 늘고 있지만, 우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자란다. /육군본부

김병주 의원은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급·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나이정년에 따라 예비군 소집의무가 없는 ‘퇴역간부(병 및 대체역은 면역)’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에서 쌓은 전문기술과 군에서 체득한 숙련도를 예비군 복무를 통해 공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예비군 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퇴역자를 예비역 또는 현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군 내부에서 교육할 수 없는 민간의 지식

과 기술을 군에 숙련된 간부를 통해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코딩의 여왕’으로 불리던 미 해군 준장 그레이스 호퍼의 재임용이다. 호퍼 제독은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던 1966년 중령으로 퇴역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미 해군은 그를 1967년 이례적으로 복귀시켰고 1971년 다시 퇴역했다가 이듬해에는 대령으로 특별진급해 해군으로 복귀했다. 그는 1983년 미 하원의 추대로 해군준장으로 진급했다. 호퍼 제독은 80세 생일을 앞두던 1986년 미 해군에서 완전 은퇴했다.

이런 사례는 미국만이 아니다. 예비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모병제 국가인 일본 자위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자위대의 경우 나이정년을 보면 위관은 만54세, 좌(령)관급은 만 56세다. 현역에서 즉응자위관(한국군의비상근복무와 유사)으로 전환한 예비자위관들을 현역시절 병과에 한정되지 않고 전역 후 쌓은 경력을 반영해 통역을 비롯한 다양한 직무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진급도 한국과 달리 1계급 한정이 아니라 상위계급 진출도 열려 있다.

투잡 예비군법의 개정 원안에 포함됐던 정년 60세와 퇴역자의 예비역 복무가 빠지게 된 것은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제1차에서 개정원안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한 퇴역군인에게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퇴역군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현실모르는 답답한 개정안”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전력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다수의 예비군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답답한 개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00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소령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로 가기위한 제도라고 소개받아 연간 30일을 복무하는 ‘확장형 비상근 복무’를 신청했다”면서 “2년 간의 코로나19 여파로 부대 소집은 단 하루였는데 편제 보직이 없어져 내년도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재선발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180일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받았다”면서 “일반 직장인이 180일까지 근무할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가능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XX동원사단 소속의 B 예비역 소령은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도 지원하는 ‘4대보험’도 없이 5년에 한정해 연간 180일을 복무하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일 뿐”이라며 “육군을 비롯한 각군은 비상근제도의 홍보와 덩치불리기에 급급해, 소령과 중령직위까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자 토사구팽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수령을 받는 다수의 예비역 소령들도 ‘전혀 매력없는 근무조건’이란 반응을 보였다.

현역 시절 동원 실무자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동원사단의 C 예비역 소령과 D 예비역 대위는 “행정계원이나 특기병의 뛰어난 실무를 재활용 한다는 취지에서 병장 전역자를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동원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안능력과 일반 예비군의 통솔은 예비역 간부들도 힘이 드는데 병장 전역자가 쉽게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동원훈련 준비와 관련 부대관리뿐 아니라 지휘자와 교관 임무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비상근복무를 비롯한 예비군 복무 선발에 새로운 기회 확대에 이해해 달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국방예산 대비 1%의 예비전력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부영주택, 하도급대금으로 갑질 ‘덜미’

하청업체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

부영주택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에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입찰 전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1억 5800여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 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게 이미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당사는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한파·대설 대비 농업피해 대책 추진

농업시설물 합동점검·교육
기상청 등 과 공조체계 구축

올해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만 1951ha(헥타아르), 시설 942ha 피해가 발생했고, 1044

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 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16~19일 실시하고, 겨울 재해대책 기간 중 수시로 지자체·농협이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추게 계획이다.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하고, 사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000명)을 구축했고, 기상청 등 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이성희 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농협중앙회

‘지역농업발전 선도’ 지자체장 9인 시상

농협중앙회, 시상식 개최
농업인 의견 수렴해 선정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2003년부터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등 9인이 수상했다. 농협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별로 추천받은 지자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반영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로비층에 마련된 지자체 농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수상자 공적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군수님의 노고에 대해 전국 농업인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면서 “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